

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개요

정부에서 1989년부터 시행한 **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**으로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
발생한 **손실을 보상**하여 **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** 도모

보상대상 ① + ② 모두 해당하는 자

-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
- ②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(환경처 고시 제90-15호 및 제90-16호)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(국무총리 지시 제1997-10호)에 따라
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자

보상범위

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
시설물잔존가액, 종묘폐기비,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

시설물
잔존가액

+

종묘
폐기비

+

시설
철거비

* 근거법령 :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

보상금 지급 절차

- 손실보상 시행 공고 ('24. 5. 13) 해양수산부
- 손실보상 신청접수 신청인 → 시·도지사
- 보상금 결정서 작성 및 검토 해양수산부
-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심의·의결 해양수산부(손실보상대책위원회)
*지자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
- 결정서 정본 송달 해양수산부 → 신청인 *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
- 보상금 지급 청구 신청인 → 시·도지사
- 보상금 지급 해양수산부 *신청인의 지급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

신청 대상

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*

* 피해어업인이 사망, 행방불명일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인도 신청 가능

신청 기간

2024년 5월 20일 ~ 2024년 8월 27일 (100일간)

신청 방법

'보상금 지급신청서'(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),
보상대상 및 피해 증빙서류,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
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

보상금 신청 · 접수처

지역	담당 부서명	주소
경기	경기도청 해양수산과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(이의동) (☎)16508
강원	강원특별자치도청 내수면자원센터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(☎)24210
충북	충청북도청 축수산과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(문화동) (☎)28515
충남	충청남도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	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(☎)32255
전북	전북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(☎)54968
전남	전라남도청 친환경수산과	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(☎)58564
경북	경상북도청 해양수산과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(☎)37687
경남	경상남도청 수산정책과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(☎)51154

이의 신청 · 접수처

담당 부서명	주소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(☎)30110

문 의 처 ☎061-659-6980 (가두리 보상 운영사무국)



검색창이나 QR코드 스캔!

<https://ifva.jnu.ac.kr/sites/ifva/index.do>

내수면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신청·지급 안내

보상금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

$$\text{보상금} = \text{시설물 잔존가액} + \text{종묘 폐기비} + \text{시설 철거비}$$

구분	산정방법
시설물 잔존가액	[시설면적(㎡)×시설면적 당 잔존가액(원/㎡)]×[1+소비자물가상승률]
종묘폐기비	[시설면적(㎡)×시설면적 당 종묘비(원/㎡)]×[1+소비자물가상승률]
시설철거비	[시설면적(㎡)×시설면적 당 철거비(원/㎡)]×[1+소비자물가상승률]

손실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시 ➡ 제출 불가 시 표준 적용

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
각 평가액의 산술평균
(해양수산부장관→감정평가법인 등 의뢰)
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
표준 잔존가액·종묘비·철거비

시설면적(㎡) 확인 가능 ➡ 불가 시 면허면적(㎡) 적용

시설면적 당
잔존가액·종묘비·철거비
34,200원/㎡, 28,900원/㎡, 4,100원/㎡

면허면적 당
잔존가액·종묘비·철거비
4,200원/㎡, 3,400원/㎡, 600원/㎡

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보상금 산정 예시

연도	면허기간연장불허연도 대비 물가상승률 ¹⁾	표준 적용 보상금 산정 예시
1990	1,900	예시1. 시설면적 2,000㎡인 경우 (1996년 불허된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물 잔존가액 [2,000 × 34,200] × [1+1.045] = 139,878,000원 종묘폐기비 [2,000 × 28,900] × [1+1.045] = 118,201,000원 시설철거비 [2,000 × 4,100] × [1+1.045] = 16,769,000원 총 보상액 = 274,848,000원
1991	1,652	
1992	1,497	
1993	1,383	
1994	1,242	
1995	1,146	
1996	1,045	
1997	0,959	
1998	0,822	
1999	0,807	
2000	0,767	예시2. 면허면적 13,000㎡인 경우 (1992년 불허된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물 잔존가액 [13,000 × 4,200] × [1+1.497] = 136,336,200원 종묘폐기비 [13,000 × 3,400] × [1+1.497] = 110,367,400원 시설철거비 [13,000 × 600] × [1+1.497] = 19,476,600원 총 보상액 = 266,180,200원
2001	0,698	
2002	0,652	
2003	0,596	
2004	0,541	

자료 「소비자물가조사」, 통계청

주1) 면허기간연장불허연도 대비 물가상승률은 「보상금산정연도 전년도(2023년) 소비자물가지수-면허기간 연장불허연도 소비자물가지수」 / 면허기간연장 불허연도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정함

주2) 본 자료는 피해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예비 산정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. 따라서 본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 예비 산정 보상금액은 소수점 자릿수 반영 등으로 인해 실제 보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보상금 지급 신청 서류



공통

보상금 지급신청서 [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]

- ①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*법인의 경우(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)
- ②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
- ③ 보상금의 신청사유 소명 자료* 일체

* 정부 정책으로 인해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

①②③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서류 (이 경우 법률 검토를 통해 여부 결정)
이전허가 및 등록필증 / 어업권등록부 / 수면 사용(불허) 관련 서류 등

재산상속인

- ① 피해어업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
 - 피해어업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(상세) 등
- ② 피해어업인의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인 증명 서류
 -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등
- ③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



손실액 증빙 가능 시

-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·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 증명 자료(해당시)

상속인대표자 선정 시

- 상속대표자 선정서 (해당시) [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]
- 상속포기, 한정승인,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기타 상속관계 서류 (해당시)

대리인 선정 시

- 위임장 [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]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

이의 신청



이의 신청 기간

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

이의 신청 방법

- 보상금 지급 결정서 및 기각 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
- 보상금 이의 신청서[시행령 별지제4호서식]와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(양식산업과)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

보상금 지급

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

보상금 환수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,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



- 소멸시효** 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
- 벌칙*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※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